

"각자 도생의시대"를 살다

KOFIC

“각자도생의 시대” 를 살다

- 2016년 독립제작영화 현황 분석

글 : 박아네스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7년 1월 13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7

Contents

01

전문 / 1

02

2016 년 독립영화제작 현황 분석 대담 / 3

Box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장소 서울 충무로 서울영상미디어센터 11층 강의실 B

진행 김현수 영진위 산업정책연구팀장

패널 강석필 인천다큐멘터리포스트 프로그래머

김화범 인디스토리 이사

어지연 CGV아트하우스 팀장

정상진 옛나인필름 대표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1. 전문

<한국영화>는 매해 연말 영화산업 관계자와의 결산 자리를 이어왔다. 하지만 논의 대부분이 상업영화에 국한됐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올해는 독립제작영화 관계자와의 만남을 별도로 마련했다. '독립제작영화'란 용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메이저 투자배급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일반 상업영화'가 아닌 그 밖의 형태로 제작되는 영화를 임의로 칭한 것으로, 독립영화를 비롯해 일부의 저예산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이 여기 포함될 것이다. 혹은 문화다양성을 위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영화라고 생각해도 좋다. 즉, 본 대담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현재 '독립영화, 다양성영화, 예술영화, 작은 영화' 등으로 불리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독립제작영화를 위한 '정책의 부재'였다. 독립제작영화가 처한 현실을 '각자도생의 시대'라 요약할 만큼 엄혹한 환경인 탓도 있겠지만, 공적자본이 독립제작영화를 그만큼 제대로 돌아보고 있지 못하단 의미일 것이다. **(전문 끝)**

김현수 오늘 자리는 메이저 투자배급 시스템 안에서 제작되는 상업영화가 아닌, 이와는 또 다른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 영화들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독립제작영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묻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2016년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한 만큼, 2016년 독립제작영화의 경과와 관련 제작 시스템 변화 등을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진 독립제작 부문 역시 제작과 배급, 마케팅이 분화돼 움직이는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엔 CGV아트하우스가 일조한 면이 있죠. 과거엔 제작사가 배급과 마케팅을 전부 책임졌다면 지금은 배급과 마케팅에 제3의 회사가 들어오고, P&A 투자도 유치하면서 독립제작영화의 파이를 키운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2016년 한국 다양성영화 흥행 10위권을 보면 CGV아트하우스와 저희 회사인 옛나인필름을 비롯해 그간 독립제작을 위해 힘써온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개별 감독을 비롯해 그 밖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제작자, 창작자, 배급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쪽'이라 칭한 부분도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공적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현수 '그 밖의 영역'이라 말씀하신 콘텐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작 환경이 열악함에도 2016년 다양성영화 개봉작 중 20~25%가량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인천다큐멘터리포스트의 강석필 프로그래머께서는 다큐멘터리 기획투자제작의 전반적인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석필 매년 상당수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개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도 극영화보다는 얼마간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큐멘터리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팬덤이 있는 장르입니다. '팬덤'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관심을 많이들 하죠. 제작이나 배급 상황에서는 어느 해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이나 제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참여적이거나 사회비판적인 영화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공적지원이 간간이라도 이뤄졌다면, 2016년엔 전무했다고 할 만큼 지원이 없었습니다. 즉, 정부 비판적인 작품의 경우 철저히 시스템 외곽으로 내쳐지는 경향이 강했죠. 사실 이는 이명박 정권 이후 계속돼온 분위기입니다. 다만 2016년엔 좀 더 뚜렷했다고 할까요? <자백>이나 <나쁜 나라> 같은 영화가 화제를 모았지만 이 역시 배급추진위원회나 몇몇 뜻이 맞는 이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공적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시스템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것은 소프트 다큐, 흔히 말하는 휴먼 다큐인데 2014년 흥행 열풍을 일으킨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480만 명) 같은 화제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진 예술영화관 통계를 살펴보면 1년에 다큐멘터리를 3편 이상 보는 관객이 상당수예요. 강석필 프로그래머가 말씀하신 일종의 팬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가 생각했을 때, 현재 이 땅에서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다큐멘터리밖에 남지 않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공적지원의 도움 없이, 철저히 창작자 개인의 열정으로 빚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강석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위기 속의 기회'라고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상영이나 공동체 중심의 제작과 배급, 상영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이빙벨>이나 <나쁜 나라> <백년전쟁> 같은 영화가 그런 방식을 견하며 더 많은 관객과 만났죠.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이 될 순 없겠지만, 관객과의 접점을 늘려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극장 개봉과 IPTV 등의 부가판권시장만을 유일한 배급 창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각 강석필 프로그래머가 말씀하시는 건 배급이 아니라 보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익이 발생해야 또 다른 작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까지의 박스오피스를 봤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긴 다양성영화가 서너 편이라도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극장 개봉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봉을 선언한 순간 상업영화와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흥행 성적을 보고 있자면 처참합니다. 독립영화 진영의 문제, 극장 시스템의 문제 등 원인을 꼽자면 여럿이겠지만, 저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MB 정부 이래 문화계 검열이 계속됐고, 그 와중에 다양성영화 지원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책이 빈 공간으로 남은 이 시기에 오로지 개별 극장과 작품만의 노력이 있었어요. 2016년 박스오피스를 보면 작은 영화의 경우 호평을 받았더라도 최대 관객이 4~5만 명, 그 밖엔 대부분 5천 명 이하입니다.

어지연 2014년 개봉한 <한공주>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2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호평받은 <우리들>이나 <4등>은 각각 4만 8천 명, 3만 8천 명가량이 들었거든요. 지난 2~3년과 비교해도 독립제작영화 흥행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정상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콘텐츠판다가 들어오면서 이쪽도 제작, 배급, 마케팅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P&A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흥행 스코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메이저 상업영화만큼 수익성에 민감한 건 아니지만, 저희 역시 '적어도 마이너스는 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커질수록 영화 선택에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겠죠. 사실 <우리들>(옛나인필름 배급) 같은 경우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기본 P&A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결국엔 진행하지 못했습

니다. 콘텐츠판다가 중저예산영화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것처럼 메이저 쪽의 자본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2016년 라인업에 <죽여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한국영화아카데미KAFI에서 제작비를 전담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영화였죠. P&A에 대한 부담을 CGV아트하우스가 온전히 질 수 있었던 것도 투자제작에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았던 영향이 큼니다.

김화범 독립제작영화 시스템에 일부 변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작 부문에서 <우리들>을 만든 아토나, <범죄의 여왕>을 제작한 광화문시네마 같은 '제작 집단'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들이 향후 독립 제작과 관련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죽여주는 여자> <연애담> 같은 영화를 내놓은 아카데미 역시 독립제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은 물론 CGV아트하우스와 같은 좋은 배급사가 함께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죠. 또 단국대 장편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어지연 팀장도 지적인 콘텐츠판다의 투자 중단 결정이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산수벤처스가 운영하던 독립영화전문투자펀드가 사라졌다는 사실¹입니다. CGV아트하우스나 콘텐츠판다의 경우 아무래도 기업에 묶인 몸이다 보니 수익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펀드 역시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작사 입장에서선 주요 투자처 하나가 없어진 셈입니다. 게다가 콘텐츠판다마저 뒤로 물러서며 CGV아트하우스에 대한 의존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독립제작영화에 공적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시장 안에서도 산업 나름의 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영화 제작에서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토나 광화문시네마 모델처럼 각자의 노하우를 네트워킹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영각 독립영화 수익률이 대략 10%가량입니다. 즉, 상업영화나 독립영화나 수익률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큰돈을 넣느냐 적은 돈을 넣느냐 하는 정도죠. 그렇게 따지면 독립영화전문펀드를 그렇게 빨리 접어야 할 이유가 대체 뭘까 싶습니다. 실무 담당자의 경우 수익률에 대한 압박이 많았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수익률만을 생각했다면 독립영화전문펀드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익률보단 예외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것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영화전문펀드의 최종 결말에 아쉬움이 큼니다. 한편, 현재 독립제작영화에 대한 공적지원은 제작 지원 부문에서는 영진위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위원회와 영화제 등을 통해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배급과 홍보마케팅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영진위의 경우 현재 P&A 지원을 편당 2~3천만 원가량 하고 있지만,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외에 영진위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마케팅비의 90%가 네이버에 쓰인다는데, 영진위가 네이버와 MOU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5억 원을 지급할 테니 20억 원어치 광고를 해달라'고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¹국내 유일의 독립영화전문투자펀드인 '대한민국영화전문투자조합1호'는 지난해 8월 초기 해산을 결정하고 9월 말 펀드 출자자를 대상으로 해산총회총회를 열어 오는 2월 최종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펀드의 당초 만기일은 2018년 8월이었다. 대한민국영화전문투자조합1호는 모태펀드가 100억 원을 출자하고 중소 영화배급사와 제작사를 포함한 10개 민간업체가 50억 원을 출연해 2013년 8월 조성됐으며, 펀드 운영은 벤처캐피털인 산수벤처스가 맡았다. 갑작스레 결정된 펀드 조기 청산을 두고 영화업계 안팎에서 "사회비판적인 독립영화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거부감이 반영된 결정"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독립영화협회와도 MOU를 맺고 일하는데 영진위 혹은 문체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광화문에 광고판을 하나 사서 독립영화를 홍보한다던지 하는 것 말입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김화범 사실 영진위가 아트플러스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과거엔 공동 마케팅 같은 부분도 고민을 했었죠. MB 정권이 들어오며 모든 게 백지화됐지만요.

김현수 말씀처럼 2007년까지는 개별 영화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아트플러스 네트워크와 같은 '체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이후 그 맥이 단절됐고 현재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 선정 중심인데요, 이 틀을 벗어나 다시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제작영화의 제작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 독립제작 진영에 진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업영화는 투자배급사가 P&A를 포함한 제작비 조달을 전적으로 하는 데 비해 독립제작영화는 어떠한지 등의 제작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영각 과거 감독들이 충무로 다방에 앉아 제작사 관계자를 만난 것처럼 지금은 독립영화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시나리오가 있으면 가장 먼저 프로듀서를 찾아다니죠. 제작사는 얼마 없기도 하고 다들 형편이 어렵다는 게 소문이 나서 PD와 직접 연락합니다. 그러고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제작 지원에 넣을지, 다른 투자처가 있을지 등요. 그렇게 네댓 명 정도를 만나면 대체로 하겠다는 PD가 없습니다.(좌중 웃음) 그런데 1년쯤 지나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놀랍게도 다들 그걸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 지원을 받든, 빚을 내서든 말이죠. 그래봐야 몇천만 원 수준일 텐데, 제가 보기엔 그 돈으로 어렵다 싶은 것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작 지원과 같은 공적 영역의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보단 개인의 열정으로 돌파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예외적인 영화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후 대책 없다>(이동우 감독)만 해도 '대체 어디서 이런 영화가 나왔나' 싶을 만큼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김화범 이사님이 아토와 광화문시네마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저 역시 이런 프로듀서 집단이나 영화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단체나 개인의 연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이 앞으로 독립제작영화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현수 말고 계시는 서독제에서 창작자와 제작자를 매칭하는 프로젝트 마켓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영각 네, 없어요.(좌중 웃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2편 매칭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김현수 하지만 선댄스영화제나 뉴욕영화제와 연계한 선댄스 인스티튜트와 IFP(Independent Film Project)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신 '충무로 다방' 역할을 하며 독립영화 제작에 앞장서고 있죠. 영화제 기간만이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프로젝트 마켓 성격의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지연 사실 말씀하신 두 조직은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수료 베이스로 움직이는 에이전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엔 전무합니다.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다들 실패했죠. 작가와 감독, PD만이 아니라 캐스팅과 투자사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화제 마켓에서는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성사되기가 쉽지 않고요.

조영각 개인적으로는 114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PD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어요.(좌중 웃음)

김현수 같은 맥락에서 인천다큐포트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투자매칭 등도 하는 걸로 아는데요.

강석필 한국 다큐멘터리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독립 제작영화가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든 것처럼 다큐멘터리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다만 장비가 저가고 적은 예산으로 후반작업까지 다할 수 있는 상황에 특별히 배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1인 제작 시스템으로도 유지되고 있죠. 또 최근 1~2년 사이 사회적 이슈를 다룬 다큐의 경우 'OO제작위원회' 형태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다큐포트는 이런 다종다양한 다큐 프로젝트의 투자매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극영화와 다른 점은 방송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데, 때문에 저희 역시 방송 쪽 자본을 끌어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방송과 영화를 포함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해외 쪽과의 매칭에도 신경을 쓰고요. 다행히 매년 2~3편씩은 매칭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산업 시스템의 외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같은 데서 투자매칭에 애쓰다 하더라도 공적 영역,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과의 연계 점을 찾아주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수 주제를 조금 바꿔 2016년 영화 가운데 <걷기왕>을 사례로 독립 극영화의 제작 실태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걷기왕>은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 기획을 시작했고, 서독제와 제작위원회를 만들어 장편 프로젝트로 옮겨왔으며, 결과적으로 CGV아트하우스의 투자를 받아 완성됐습니다.

여지연 시작은 '서독제 기획, 산수벤처스 메인투자, CGV아트하우스 부분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영화전문펀드에 문제가 생겨 산수벤처스가 빠지게 되면서 저희가 메인투자를 맡게 됐죠. 일반 사모펀드와 BK기업은행 등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여기까진 일반적인 투자 시스템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걷기왕>으로 처음 경험한 건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접목한 부분입니다. BK투자증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BKS문화콘텐츠투자크라우드펀딩3호)했고, 약 2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1억 원 이상을 펀딩받았습니다. 저예산영화에서 크라우드펀딩이 또 하나의 자금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정상진 저 역시 <자백>을 하면서 스토리펀딩을 통해 후원형(리워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는데, 개인적으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좌중 웃음) 펀딩 참가자 데이터가 어마어마한데 거짓말 안 보태고 그중 20%가 이름도 연락처도 아이디도 남기질 않았어요. 이들을 일일이 찾아서 연락해야 하는데, 여기 드는 시간과 공이 엄청납니다.

조영각 3만 명이나 되는 이들에게 후원을 받았으니까 힘들죠(웃음) 앞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극영화에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백>을 포함해 다큐멘터리의 경우 후원형은 가능해도 증권형은 힘들고요. 게다가 <자백>도, 또 다른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무현, 두 도시 이야기>(스토리펀딩)도 결과적으로 '스타 캐스팅'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걷기왕> 주연은 심은경이었죠. 저는 독립영화에서의 크라우드펀딩에는 회의적입니다. 1억 원가량이 모인다면 해볼 만하겠지만 2~3천만 원 수준의 후원형은 인건비도 안 나와요.

김현수 크라우드펀딩은 어떤 면에서 '한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군요. 독립제작에 역사가 깊은 인디스토리의 경우 제작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걷기왕>의 제작사이기도 하시죠.

김희범 다른 제작사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 단편영화 배급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꽤 많은 감독을 찾아 장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1년에 1~2편 정도는 그렇게 감독을 발굴해서 진행합니다. 해당 감독이 장편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 기획개발을 같이하기도 하고요. <걷기왕>의 백승화 감독도 그렇게 만난 경우입니다. 단편을 통해 본 연출 스타일이 우리와 맞거나, 시나리오로 역량이 검증됐다

면 기획개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제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설령 프로젝트가 지연된다고 해도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지요.

김현수 옛나인필름은 어떤가요? <숫호구>(2014)와 <시발, 놈: 인류의 시작>(2016) 등을 제작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정상진 독립제작이 의미는 있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작과 배급, 마케팅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 몇백만 원 단위의 초저예산도 제작은 가능합니다. 결국 P&A 싸움인 셈인데, P&A에 최소 1억 원은 필요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할 만한가가 고민인 것이죠. 조기 청산한 독립영화전문펀드에 LP(Limited Partner, 펀드 출자자)로 참여했는데, 사실 제작을 직접하기보다 이처럼 펀드에 출자해 좋은 작품을 하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어요. 하지만 만약 다시 또 이와 같은 투자조합이 결성된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다. 영화산업 플레이어가 해야 할 몫이란 생각도 있고요.

김현수 'P&A 비용으로 최소 1억 원은 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상진 <자백>은 P&A에만 8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앞서 지난 몇 년 사이 박스오피스가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디스토리나 CGV아트하우스, 또 저희 회사가 못해서 관객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찾아보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지금의 관객 대부분은 잘 알려진 영화를 시간이 될 때 봅니다. 그러니 와이드 릴리스가 필요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광고는 해야 하는 것이죠. 2016년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든 한국 다양성영화 가운데 <무현, 두 도시 이야기>만 개봉 스크린이 31개고, <자백>은 125개, <죽여주는 여자>는 317개, <글로리데이>와 <서울역>은 각각 425개와 427개였습니다. 다양성영화도 과거에 비해 스크린이 많이 늘었죠. 그럼에도 <자백> 후원자에게 '집 앞 극장이 아니라 차로 40분 거리 극장까지 내가 왜 가야 하느냐는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교통비를 달라'는 얘기도 하시고(좌중 웃음) 때문에 전 제작사나 감독에게 가능한 배급 규모를 먼저 얘기하고 그 이상을 원하면 CGV아트하우스에 양보합니다(웃음) 욕심을 낸다고 능사는 아니죠.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사실 독립제작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P&A 비용이 없어서 배급을 못하죠. 앞서도 네이버와 MOU를 맺는 등의 독립제작영화 홍보 관련 의견이 나왔지만 영진위가 중심이 돼 독립영화 P&A와 관련한 펀드를 만들거나, 마케팅과 관련된 협의체를 결성하는 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독립영화든 상업영화든 똑같은 영화입니다. 오로지 재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상업영화와 똑같은 수준에서의 노출 기회가 있어야 하거든요. 인지도가 있어야 선호도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지도가 결국 돈과 연결돼 있으니 독립영화는 태생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CGV아트하우스가 돈 안 들이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극장에서의 광고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작품에도 한계가 있죠. 또 옛나인필름도 KT&G상상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영진위가 마케팅 채널을 갖고 있는 곳과 협의체를 결성하고 정책적으로 독립영화를 위한 채널을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방송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독립영화만을 다루는 공간(채널)이 확보된다면 어떤 것보다 실효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진 참고로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때 (사)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발족했는데, 함께하는 회사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온라인상의 공동 마케팅 툴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건 독립영화계에선 하기 힘든 부분이니 공적자금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 부문에선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할 것 같고요.

김희범 작은 규모 배급사의 경우 영진위의 다양성 개봉 지원을 받지 않으면 P&A는 마이너스로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개별 영화에 대한 개봉 지원도 중요하지만 배급사 자체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P&A 비용으로 한 영화에 2천만 원 정도가 든다면 또 다른 영화는 그 두세 배가 필요하기도 하죠. 기존 지원제도는 2천만 원 혹은 3천 만 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일정 이상의 라인업을 갖춘 배급사를 지원하고 총액 안에서 영화에 맞게 자율적으로 P&A를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자유경쟁 체제에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게 당연하지만, 독립영화 배급이 영화산업 안에서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한다면 고군분투하는 배급사를 위해 지원 형식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해 연말 성과를 평가해 다음 지원에 자료로 삼는다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앞선 의견처럼 공적인 홍보나 홍보 채널 확보, 간접적인 광고 지원 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영진위에서 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수정해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진 조금은 주제를 벗어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인디스토리를 비롯해 많은 수의 작은 제작사와 배급사가 독립영화관으로부터 부금 정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5~6년씩 안 주는 곳도 많죠. 배급사 입장에서 거래를 안 하고 싶어도 스크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그럴 수도 없는 처지고요. 이 중에서 영진위 지원을 받는 극장도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영진위가 공적 감시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영진위가 예술영화관과 독립영화관 같은 작은 극장의 발권을 통합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밴사와 협의를 맺고 밴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해준다면, 수익정산에 대한 감시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석필 유통배급에 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저 역시 두 가지 정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 도서관을 설립하면 의무적으로 50~70석 규모의 소극장을 지어야 합니다. 제가 현재 영상위원회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공공상영관을 운영 중인데, 많진 않아도 수요가 꽤 있습니다. 주요 배급사와 연간 계약을 맺고 기본 관객 30명을 기준으로 수익을 정산하는데, 한 해 평균 500~7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옵니다. 3년 전 인천에서 시작해 현재는 서울에서만 20군데가량으로 확장됐는데, 오늘 대화를 시작할 무렵 제가 말씀드린 상업영화 배급 시스템 바깥에서의 유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2~3년간의 경험으로 공공시설을 통한 배급도 웬만큼은 쓸모가 있다고 증명됐으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얼핏 수익이 적은 것 같아도 주요 배급사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KT 같은 통신사를 통해 셋톱박스에 독립영화 채널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인천다큐포트에서 산수벤처스와 투자매칭 지원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독립영화전문펀드 운용도 좋지만 P&A에 특화된 펀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중 상당 부분이 P&A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설계한다면 투자사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며 매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현수 역시 P&A에 대한 의견이 많군요. 한때 온라인 시장이 다양성영화 배급의 또 다른 기회로 여겨졌는데, 독립제작 쪽에선 이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시장이죠. 극장에서 관객 10만 명 이하로 든 영화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온라인에서도 큰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IPTV 등의 화면에도 10만 이하 흥행작은 노출조차 되지 않고요.

조영각 오늘 계속해서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온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렌트를 대표로 한 불법 다운로드도 독립영화의 경우엔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메이저 투자배급사에선 대행사를 쓰

거나 직원을 고용해 불법 업로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독립영화계는 그럴 자금이 없습니다. 게다가 업로더가 '고소당하지 않는 콘텐츠'를 귀신같이 알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독립영화입니다. 모니터링이 불법유통을 100%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어막은 돼줄 수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보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지난 10월 도종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여러 사안이 언급됐지만 도종환 의원이 낸 개정안 중 하나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상영관의 경우, 1개 이상의 전용 상영관을 배정해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을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상영에 할애²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합상영관을 규정하는 '일정 규모'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령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관이 전국 250개라고 한다면, 전체 스크린의 10%가량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인정작 상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공급(독립제작)이 적은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지금보다는 상영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회범 지금은 독립영화가 거의 계토화된 상태죠. 거기다 스크린은 적고 영화는 쏟아져 징검다리 편성밖에 안 되고요. 산업 논리에만 맡겨두면 상황은 더 나빠지지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형태의 쿼터가 계속돼야 하느냐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지만, 개인적으로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쿼터제'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극장 이익이 줄어드는 등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겠죠 때문에 무기한,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단 극장과 협의의 통채 타협점을 만들어가면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필 상영 쿼터를 통해 얻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다면 충분히 적용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도 P&A에 관한 부담이 큰데, 상영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실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이 분명 있죠. 물론 P&A에 관련한 보완 장치로서의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정상진 상영 쿼터 비중을 얘기하기 전에 '영진위가 인정하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기준이 적절한지부터 살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말 중 가장 싫어하는 게 '다양성영화'인데, 현재 다양성영화로 인정되는 영화 가운데 정말 많은 수를 재개봉영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가 앞다퉈 하고 있는 단독 개봉작도 마찬가지죠.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다양성영화 인정 기준과 관련해 세밀한 조정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쿼터를 주고 상영을 보장한다고 해도 한국 독립제작영화가 살아날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조영각 일단은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영 기회가 늘어 P&A가 늘어나는 것도 배급사가 선택할 부분이 고요. 문제는 이 법안에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상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쿼터가 쓸모가 있으려면 10여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다양성영화'에 대한 용어부터 재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영관만 늘리고 P&A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진전이 없을 겁니다. 즉, 앞서 말한 마케팅 지원 같은 것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배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독립영화에 의무 상영을 주면 극장 수익은 당연히 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민된 상태인가요? 상영 쿼터

² 제43조의2(복합상영관의 상영제한 등) ②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 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영진위가 인정한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전용 상영관을 1개 이상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해야 한다.

의 경우 일견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규제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규제에 합당한 법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수 오늘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언급된 부분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영진위 지원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요?

조영각 일단 독립제작영화와 관련된 지원이 너무 파편화돼 있습니다. 독립영화는 전체 12억 원을 50편에 나눠 지원하는데, 편당 제작비의 최대 7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죠. 또 예술영화 제작 지원금은 편당 평균 9억 원으로 제작사의 제작비 자기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영화는 왜 따로 분리해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관람가 영화를 우선한다'거나 '10편을 뽑으면 전체 관람가 영화를 최소 1편은 뽑는다'거나 하면 될 텐데. 지원은 파편화돼 있고 개별 제작 지원마다 기준은 또 전부 달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해외영화제를 다녀온 영화와 아닌 영화를 구분하면서 뭔가 '등급'을 매긴다는 인상이 강한데, 정책기관이 영화를 두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진위 지원은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 우선해 투자환경, 제작환경, 배급과 상영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책을 다루는 영진위 본연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환경이 제대로 조성되면 개별 콘텐츠를 일일이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얻게 되겠죠. 직접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인프라 조성에 좀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예술영화전용관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쓴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인디스페이스를 주요 거점 도시에 짓고, 시네마테크와 연계해 전국에 적어도 30개가량의 예술영화전용관을 마련할 계획이었죠. 여기 멀티플렉스 계열의 CGV아트하우스가 또 다른 상영 공간을 만들면서 공생했다면 멀티플렉스에 상영관을 쿼터로 내놓으라는 규제안에 대해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시간을 역행해 현재는 독립영화전용관에 자율적인 프로그램 편성 권한도 주질 않습니다. 이걸 지원이 아니라 자생의 움직임을 꺾는 일입니다.

강석필 최근 몇 년, 특히 지난 2~3년은 정부 지원에서 특정 작품에 대한 배제, 특정 영화인에 대한 배척이 은연중에 있었던 게 여러 사람의 생각입니다. 영진위 스스로도 이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